

# MB “올해만 광주·전남 다섯번 왔다”

### 지역 현안 상세히 나열하며 ‘호남구애’ 적극 행보

### 민주당 “숙원사업 챙기는데 뭐랄 수도 없고...” 난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4일에도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불과 보름도 안 된 기간에 두 번이나 호남을 찾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우호적 여론 형성 물과구를 호남에서부터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이 (올해) 다섯 번째 광주·전남에 온 것이다. 곧 이 다시 온 것은 광주·전남 사·도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광주시의 관광업, 친환경 부품단지, 비엔날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현안사업들을 거론하며 광주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여수 엑스포, F1 자동차경주대회 등 전남의 현안사업과 남해안 선벨트 사업을 거론하며 전남이 글로벌 경제물류거점이자 해양관광휴양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현안사업을 일일이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 호남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광 대마

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유치 기업들이 공장을 짓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껏 유치한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애정이 어린 훈수를 건네기도 했다.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각 뜻한 예우를 갖추면서 서도 지난 ‘영산강 살리기’ 행사에서처럼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은 삼갔다.

이날 박 시장은 “호남고속철도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더불어 중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번영의 서해안 시대를 여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광주가 활기찬 희망과 역동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영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하지 않았지만, 기공식에 앞서 이 대통령이 방문한 영광 대마산업단지과 원전 현장에서 의전에 최선을 다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남 공

략에 민주당은 불편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영산강 살리기’ 행사 당시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당 소속 단체장들의 4대강 사업 지지성 발언으로 당내 엇박자를 연출한 뒤여서 이 대통령의 호남 방문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산강 살리기와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폄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비난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영산강 살리기 행사에 집단 불참했으나 이날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는 김동철, 김재균, 강은태, 이낙연, 이윤석 의원 등 일부 지역 의원들이 참석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시설

### 李대통령 ‘균형발전 후퇴’ 지역여론 새겨야

광주일보사가 광주·전남 여론 주도층인 인터넷 패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0%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 발전이 후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수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듯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지역균형발전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각은 비단 광주·전남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여론조차 부를 부를 끌고 있다.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을 두고 대구·경북은 “타지방은 굶을 관인데 ‘부자 곳간’에만 쌀을 더 채워넣으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영·호남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영남지역 여론이 이 모양 일진대 타지방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해 왔다. 4일 호남고속철 기공식에서도 “정부는 전국 방방곡곡이 자신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의칠 뿐 그 어떤 후속조치도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이전대상 공기업 기관장을 당장 불러 연내 부지 매입 등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후퇴를 우려하는 지방여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한다. 영남지역 여론이 이 모양 일진대 타지방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 철도 노사, 열린 마음으로 협상 나서라

철도노조가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국가 동맥인 철도운영 차질로 산업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접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파업철회는 정부와 사측의 압박과 일부 국민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조강제로 나선데 사측의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사법 당국의 체포영장 발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처음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나마 고용 안정을 누리고 있는 공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기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새롭고 합

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철회를 항복이나 패배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철도노조의 후퇴를 ‘강압적 노동정책’의 성공으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계기로 공공기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노조의 파업 철회 결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노조의 요구나 단체협약은 과감히 개정하되 노사가 공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측은 이제라도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강경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사태를 대화 국면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의 목표는 노사가 함께 사는 방안을 찾는 것이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MB ‘호남쟁기기’

### 정용화 비서관의

### 숨은 노력도 한몫



이명박 대통령이 잇달아 호남을 방문하고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배경의 한 축에는 강진 출신 정용화(사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작성 업무를 맡고 있는 정 비서관이 각종 연설문 등을 작성하면서 광주와 전남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호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터에 정 비서관의 애정함이 작용해 최근의 호남 끌어안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4일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도 정 비서관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호남지역 행사 등과 관련, 정 비서관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각별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의 연설문인 만큼 한번 작성하기 위해 많은 열 번이 넘도록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문장 한 구절을 작성하고, 단어 하나 선택하는 데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비서관은 청와대 내의 광주·전남 지역 창구 역할을 맡아 각종 지역 현안을 충실하게 챙기다가 하면 직접 지역에 내려가 이명박 정부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설득하고 있다.

여기에 특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에게 수시로 메일을 보내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영광원전 둘러보는 MB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영광 흥농을 영광원자력발전소 6호기 연료건물 입구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과 함께 김중신 한수원 사장으로 부터 시설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달러 전냈다”

### 대한통운 前사장 진술 ... 한 前총리 “사실무근 법적대응”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역육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의원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광씨가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주목, 그가 그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리를 지낸 한 전 의원에 게 줬다는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준 대가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를 조사 중이

다.

물류 전문가인 광씨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으로 지내다 2007년 4월 특별히 업무 연관성이 없는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 한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전 의원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명경 사무총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우리 당 삼임고문이자 여성 총

리를 지낸 분으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양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려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광씨의 진술에서 액수,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강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에서 정·관계 요직을 지냈던 정치인 J씨와 K씨 등 다른 인사들도 광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2012년까지 한전, 혁신도시 이전 당부

### 국토부, 14개 이전 기관 초청

국토해양부는 4일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4개 주요 기관을 초청해 회의를 열고 2012년 말까지 이전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혁신도시 정상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이전 기관을 상대로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독려했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한국도

로공사(경북), 한국전력(광주·전남), 한국가스공사(대구) 등은 청사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등은 조만간 청사 설계와 부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대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혁신도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떡값 검사’ 실명 공개 기소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제

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발언 내용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돼야 한다”며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사실 만료를 앞두고 여론 조성을 위한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심기록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는 그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 ..

## GDP성장률 7년여만에 3%대 진입

전분기비 0.3%P ↑ ... 내년 5% 전망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3.2%를 기록하면서 7년6개월만에 3%대 진입했다.

제조업의 실적 개선으로 속도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민 총소득(GNI)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전기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GDP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기 대비 3.2% 성장하면서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속도치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전기 대비로는 2002년 1분기의 3.8% 이후 최고치이다.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0.9%를 기록하면서 속도치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3분기 이후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제조업이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생산 호조로 전기대비 9.8% 증가하면서 GDP 성장을 이끌었으며 서비스업도 운수와 보관업, 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급속한 경기 회복을 고려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20만명 내외 증가, 경수수지는 150억 달러 내외 흑자, 물가는 2% 후반대를 목표로 잡을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慶完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F A X> 227-9500	<F A X> 02-773-9500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